

2014년 미국 고용전망: 미 경제는 자립할 수 있는가?

Randall W. Eberts (미국 W.E. 업존 고용연구소장)

2007년 12월 경기침체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 6년이 지났지만 고용은 아직 침체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12월 현재 GDP나 증시(S&P 500지수)와는 달리 고용인구는 침체 전 고점에 근접하고 있으나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다. 침체 직전의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 130만 명, 또는 1%포인트가 추가되어야 한다. 지난 1년간 일자리 증가는 월 18만 2천 명을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보여왔다. 이 추세라면 2014년 중반이면 침체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시장이나 경제 전반에 주어진 핵심적인 문제는 추가적인 재정이나 통화부양책 없이 독자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경제성장이 다시 시작된 2009년 7월부터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을 통해 약 8,350억 달러의 경기부양이 이루어졌으며, 연방준비이사회는 3단계의 양적완화를 통해 약 3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채권 및 주택담보부증권을 매입했다. 이를 통해 중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의회에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고용과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의회에산처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부양책의 고용효과는 최대 810만 명에 달한다(경기부양책이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¹⁾ 연준의 양적완화를 통해

1) "Estimated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n Employment and Economic

가능한 저금리 기조는 주택시장과 건설업계의 부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창업 및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데 일조했다.

올해는 이러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 관련 기금은 거의 1~2년 전에 소진되었으며 연준의 양적완화 역시 실업률이 6.5%대로 하락하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연준이 양적완화 3단계를 종결시키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하나둘씩 거두어들이면서 문제는 미국 경제가 미래성장을 위한 기초경제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충격에 취약한 상태인지 여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2013년까지 재정 불확실성을 겪는 상황에서도 미 경제가 보여준 회복력에 희망을 건다. 연방예산과 부채한도를 둘러싼 두 차례의 의회 대립에도 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10월, 연방정부가 16일간 섰다운 되면서 업무의 일부가 정지되었고 연방 공무원 대부분이 강제휴가를 내야 했던 파행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고용이나 증시만을 보았을 때는 별다른 경제적 동요가 없었다.²⁾ 2011년 8월의 유사한 상황에서는 정부 섰다운이 없었음에도 증시 폭락, GDP 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성장이 크게 흔들렸던 바 있다.

■ 2013년의 견실한 고용성장

2013년 거의 전 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은 월 평균 18만 2천 명씩 증가하면서 제 모습을 되찾은 것으로 보였다. 2년 연속 고용창출이 월 평균 18만 명을 상회하면서, 경제성장의 기반이 탄탄하다는 징후를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7개월 내에 경제위기 전 최고점인 2007년 12월 고용인구인 1억 3,800만 명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망이 실현된다면 78개월 만에 고용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매우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데 과거 경기주기에 비교하면 실제로도 그렇다. 지난 네 차례 경기침체의 경우에는 첫 두

Output from October 2012 Through December 2012,” Congressional Budget Office, February 2013.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이 따르면 고용효과는 170만~180만 명 수준이다.

2) 2013년 4분기 GDP 수치는 아직 발표 전이지만 S&P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수차례 경신했다.

차례인 1981~1982년, 1990~1991년은 고용이 침체 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약 28주가 걸렸으며 2001~2002년 침체 후에는 약 45개월이 걸렸다. 물론 직전 세 차례의 경기침체는 이번 대침체기(Great Recession)만큼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체 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고용성장 역시 그 폭이 작았다.

이번 경제회복기의 고용성장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은 회복기에도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자영업연맹(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es)의 보고에 따르면 중소기업 심리지수는 장기 추세에서 아직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라 한다. 이 지수는 1986년 설정 이후 이번 침체 및 성장기 전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 그러나 민간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CEO 심리지수는 현재 60으로, 이는 자기 회사의 성장성 및 경쟁력에 자신감을 느끼는 CEO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이러한 심리 차이가 경제회복 기간 동안 50인 이상 고용주의 고용 비중이 100인 이상 고용주 대비 하락한 것을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느린 경기회복

한편으로 지난 2년간 고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성장이 과거 침체기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고용성장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회복기에 들어선지 54개월이 지났지만 실질 GDP 성장률은 10.3%에 불과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홉 차례에 걸친 경기회복기 및 성장기 중 이번 회복기가 기간을 불문하고 가장 느린 양상을 보인다.³⁾ 과거 54개월 이상 지속되었던 다섯 차례의 경기성장기 중 54개월 이후의 실질 GDP 성장은 평균 19.3%로 이번 회복기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 다섯 차례의 경기성장기 동안 54개월 이후 연 실질 GDP 성장률은 4.2%로 지금의 2.3%와 비교된다.

그러나 2013년 12월 20일에 발표된 최근의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3분기 성장률은 연

3) 유일한 예외는 1980년 침체 이후 15개월에 걸친 회복기였다. 이때의 GDP 성장은 4.4%였다. 그러나 이 회복기간은 단기간에 불과했고 이후 1981~82년 더 심각한 침체기가 뒤를 이었다.

4.1%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에 가속도가 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회복기 평균에 근접하지만 지속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성장세의 40%가 재고 확충을 위한 것으로 이는 2013년 4분기나 2014년에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 고용성장세가 의외로 부진했던 것은 2013년 4분기의 견조세 이후 2014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노동통계국의 2014년 1월 10일 발표에 의하면 2013년 월 평균 18만 2천 명 증가하던 고용이 2013년 12월에는 7만 4천 명에 그쳤다. 이는 일자리 증가가 6만 9천 명에 불과했던 201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 회복기 전후로 성장을 유지했던 의료보건산업과 같은 분야와 경기회복기에 함께 회복한 제조업 같은 분야는 12월에는 고용증가가 없이 거의 정체되었다. 민간 제조업에서는 3천 명의 고용 감소가 있었고 민간서비스업에서는 9만 명 증가에 그쳤다. 정부(엄밀히 말하면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업에서는 1만 5천 명의 고용감소가 있었다.

■ 향후 전망

42개 전망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4%에는 크게 못 미치는 2.6%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역시 2013년 전망치였던 1.7%보다 거의 1%포인트 높고 2013년 3분기까지 기록한 실질 연성장률인 2%보다 0.6%포인트 높다. 고용에 대해서도 2014년 월 평균 18만 9천900명의 고용증가를 예상하는 높은 기대수준을 보여주는데, 이는 2013년의 실질 증가세인 월 18만 2천 명보다 높은 수치이다.

2014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질 GDP 성장률과 비교하면, GDP 성장률이 동일할 경우 고용증가세는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증가율 전망치 대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의 비율은 2014년 0.65(1.69/2.6)로 2013년의 0.98(1.66/1.70)보다 낮다. 그러므로 2014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더 높지만 성장 대비 일자리 창출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전망 비율이 2013년보다 낮지만 경기회복이 시작된 지 53~5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비율은 실제 고용증가율/GDP 성장률 비율과 유사하다.

■ 구조적 불균형

경기회복이 느린 것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 보기에는 단기적 요인보다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산처의 연구에 따르면 느린 회복세의 3분의 2 정도는 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에 반영되어 있다. 나머지 3분의 1은 양적 완화의 종료 및 주택투자 등 주로 단기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⁴⁾

잠재 GDP 성장률은 경제를 이끄는 기초적 요인을 반영한다. 즉 경제에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과 자본, 이들의 품질 및 이용의 효율성이다. 의회에산처 연구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이 두 가지 중요한 투입물의 가용량이 감소했다. 노동력의 경우 경기침체기에 발생한 대대적인 정리해고 이후 유례없는 장기간의 실업상태를 겪으면서 이들의 숙련도와 노동시장 연계가 약화되었다. 27주 이상 실업자가 390만 명 이상, 또는 전체 실업인구의 37.7%에 달하는 데 반해 고용주들은 빈자리를 채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다른 원인은 장기적 추세와 관련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대규모로 퇴직하고 있는데 생산인구 증가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어져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잠재 근로인구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자본을 감소시키는 등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이는 자본/노동비율이 유지될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많은 산업과 직종에서는 자본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GDP 대비 국내투자 비율은 이번 경기침체 기간 동안 2차 세계대전 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현재에도 과거 최고치였던 20%에서 여전히 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기업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투자할 수익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번 회복기 동안 GDP 대비 기업이익률은 12%대에서 계속 높아지는 등 사상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익률이 높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주된 이유는 세계화의 확산과 법인세라 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렇게 창출된 이익을 미국에 다시 가

4)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12. 9), "What accounts for slow growth of the economy after the recession?"

저오지 않고 법인세율이 더 낮은 외국에 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내 기업의 장비나 시설에 투자할 이익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에 두는 수익이 그 나라에 투자하는데 쓰이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미국에 투자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 재정 부담

보다 단기적으로는 의회의 재정긴축 추진과 연방부채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초 양대 정당이 연방예산과 연방부채 해결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큰 폭의 예산삭감이 자동으로 발동되는 재정절벽만은 모면한 듯싶었다. 이러한 재정긴축은 경제성장을 크게 위축시켰을 것이다. 의회예산처는 이러한 자동삭감과 세율인상이 실제 발생했다면 3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하여 실업률은 당시 7.8%에서 2013년 4분기 9.1%로 증가했을 것이라 추정한다.⁵⁾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출삭감과 세율인상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종료된 직후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더 가중되었을 것이다. 2009년 2월에 제정된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은 2년간 8,4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다. 경기부양책에 의한 지출은 2011년 9월에 종료되었지만 의회예산처의 분석에 따르면 그 효과로 인해 2012년 한 해 동안 120만 개, 2013년에는 5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었다.

그러나 예산을 둘러싼 대립은 그 당시 해결된 것이 아니었고, 의회는 2013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전반적인 예산삭감을 단행했다. 미 정부가 이자지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2013년 3월 의회는 사회보장제도만을 제외하고 국방을 비롯한 전 분야에서 자동 지출삭감에 동의했다. 그 결과 2013년 연방지출이 약 450억 달러 줄었다. 의회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지출삭감으로 인해 2013년 4분기까지 GDP 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하고, 일자리는 75만 개 감소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이다. 2014년에도 유사한 규모의 지출삭감이 예정되어 있으며 의회예산처는 이로 인해 일자리가 90만 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12. 9), "Economic Effects of Policies Contributing to Fiscal Tightening in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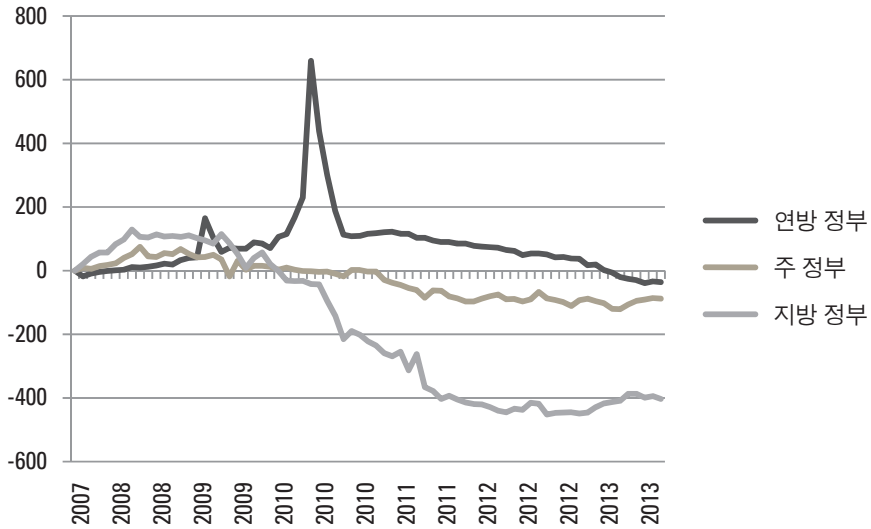
향후 연방지출의 삭감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증가세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며 이는 가까운 미래에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4년 1월 16일 의회는 일괄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예산 자동삭감 당시 삭감분의 일부를 원상복구시키고 일괄적인 삭감대신 보다 합리적인 예산작성 방식을 마련한 것이다. 2013년 봄 예산 자동삭감 당시 폐지된 일부 국내 사업에 대한 지출을 위해 약 200억 달러를 원상복구시켰다. 그러나 1조 1,000억 달러라는 신규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질 달러가치로 환산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갓 취임하고 경기침체가 본격화하기 전인 6년 전에 의회가 승인한 규모보다 적다. 문제는 이러한 긴축정책이 연방부채를 경감시켜 장기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경제회복의 현 단계에서 기초경제 여건이 어느 정도 견고한지에 달려 있다.

■ 공무원 인력 축소

경제성장 둔화와 광범위한 정부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이번 회복기 동안 공무원 인력이 감소했다. 이것만으로도 고용상황에 부담이 된다. 민간부문에서 경기침체기 동안 잃어버린 일자리를 회복해야 할 뿐 아니라 정부 일자리 감소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 수는 2007년 12월 최고치 대비 527,000명 감소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감소폭의 대부분이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다(40만 명 감소). 지방 교육공무원이 인원이나 비율상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총 276,000명 감원으로 3.5%가 줄었다. 연방 공무원은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하의 채용과 2010년 인구조사를 위한 채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 정부 고용은 최근까지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인 감소가 있었다. 현재 연방, 주, 지방정부 고용규모는 각기 210만, 510만, 1,410만 명에 이른다.

[그림 1] 2007년 12월 대비 정부 고용인원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2014년이 다가오면서 또 한 가지 우려사항으로 환자보호 및 건강보험개혁법(ACA)이 고용에 미칠 영향이 거론된다. 건강보험개혁법은 기존에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 4,000만 명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0년에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2013년 10월에야 운영되기 시작했다. 주 정부가 주관하는 근로거래소에서 보험사들이 경쟁을 통해 근로자를 유치하는 방식인데 2013년이 되어서야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개혁법은 의료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항을 마련하였다. 첫째, 개개인이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벌금형), 둘째,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벌금형), 셋째, 공공지원 의료보험 확대 등이다. 의료보험 미제공으로 고용주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전일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000달러이다. 또한 의료보험 확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메디케어 세금 및 부담금이 소폭 인상되었다. 이에 따른 우려는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전일제 근로를 시간

제로 바꾸든지 아예 근로자 수를 줄여 의료보험 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조항에 따르면 개인의 의료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형은 2014년부터 발효되며 기업 대상 벌금은 2015년이 되어서야 발효된다.

그러나 주 거래소를 통한 의료보험 가입이 10월에 시작되면서 고용주가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일제 근로자 수를 줄이면서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0월 BLS 일자리 보고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간제 근로자 수가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간제 고용이 경기침체 이전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추세는 2010년에 건강보험개혁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는 이미 시간제 고용을 활용하는 특성이 두드러진 부문에서 나타났으며 전통적으로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종에서는 그러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것이 건강보험개혁법의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아니지만 10월에 나타난 시간제 근로자의 단기적인 감소와 전체 고용의 증가 등으로 적어도 지금은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엄밀한 학술적 연구결과를 보면 건강보험개혁법은 고용보다는 임금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개혁법에 몇 년 앞선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메사추세츠 주 의료개혁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 정부가 앞장선 이 개혁 전후로 고용주의 의료보험 제공률은 70%에서 76%로 증가하였지만 임금 인상폭이 5,000달러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인하는 건강보험개혁법이 고용보다는 임금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근로자들이 의료보험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건강보험개혁법이 연방정부 지출 및 적자를 가중시킨다면 향후 경제 및 고용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의회에산처는 건강보험개혁법으로 인해 의료보험가입자가 3,200만 명 증가하면서 연방정부 지출이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의회에산처는 건강보험개혁법으로 인한 세수증대 및 지출감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결과 연방정부의 예산적자 비용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므로 재정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개혁법의 영향은 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개혁법이 경제성장이나 고용에 별다른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학술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는 의료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미 근로자 수나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이러한 비관론의 정도는 조사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과 10월에 실시된 미 상공회의소 및 국제프랜차이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400개 소규모 프랜차이즈 운영주(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이나 유통매장) 중 건강보험개혁법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64%에 달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 53%가 부정적, 12%가 긍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31%, 프랜차이즈 이외 사업장의 12%가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응답자가 두 배에 달했던 국제근로자복지후생재단(International Foundation of Employee Benefit Plan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이미 조정했거나 조정할 예정인 응답자는 16%에 불과했으며 채용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응답자는 이보다 더 적었다.⁶⁾

■ 실업수당 수급기간 연장 폐지

의회는 또한 26주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수당 수급기간 연장(EUC)을 철회하였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장기실업자는 사상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연방예산 타협안의 일환으로 장기실업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2013년 말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수급기간 연장으로 혜택을 받던 실업자 130만 명이 더 이상 이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2014년 말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실업자 수는 360만 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수급자 중 상당수에 달하는 약 170만 명은 실업수당 연장 없이는 빈곤층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자문위원회가 의회예산처와 함께 분석한 결과 실업수당 수급연장은 예산 1달러당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문위원회는 실업수당 수급연장이 만료되면 2014년 24만 개의 일자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의회예산처는 실질 GDP가 0.2~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 International Foundation of Employee Benefit Plans(2013), "2013 Employer-Sponsored Health Care: ACA's Impact."

■ 소득불균형 증가 및 최저임금

오바마 정부는 미국 내 빈부층 간의 소득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며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에서 최저임금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여긴다. 의회에서 책정한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며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이는 연방 최저임금이며, 5개 주를 제외한 각 주에서는 자체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21개 주와 D.C.에서는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10개 주에서는 생활비 지수와 최저임금을 연동하고 있고, 이들 중 1개 주를 제외하고 매년 초에 이를 조정한다. 2014년 1월 1일에도 이들 10개 중 9개 주는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했다. 나머지 29개 주의 근로자들은 연방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적용 받는다. 오바마 정부는 2013년 11월 민주당 하트(Hart)와 밀러(Miller) 상원의원이 발의한 시간당 최저임금 10.10달러 인상법안(하트-밀러 법안)을 지지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는 워싱턴 주로 시간당 9.32달러인데 하트-밀러 법안은 이보다 약 1달러 높은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생활비 지수와 연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이 1960년대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이 되었다면 지금쯤 10달러가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인상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없애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발표된 수십 건의 최저임금 연구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너무 작아 통계적으로 감지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⁷⁾

일부 주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 생활비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상향조정되는 주들뿐 아니라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4개 주 의회에서는 많게는 1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안을 가결시켰다. 뿐만 아니라 최소 30개 주에서 일부 의원들(대부분

7) Dale Belman and Paul Wolfson, *What does the Minimum Wage Do?* Upjohn Institute Press, forthcoming.

민주당 소속이 최저임금 법안을 후원하거나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는 연방의회에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최저임금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 주에서 주도한 최저임금 인상폭은 하트-밀러 법안에서 제시한 인상폭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높인다면 3천만 명 이상의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권자들 사이에 폭넓은 지지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연방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상폭은 하트-밀러 법안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맺음말

지난 2년간 미국의 고용은 월 평균 18만 2천 명이라는 상당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실업률은 6.7%로 하락했다. 그러나 침체 전 고용수준을 되찾는 것은 2차대전 후 있었던 경기회복기간 중 가장 오래 걸리고 있다. 침체 전 고용수준 회복은 올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경기침체와 그 후의 부진한 회복세는 미 경제에 중요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대한 규모의 실업자, 특히 6개월 이상 구직에 실패해온 장기실업자이다. 경기침체의 잔재라 할 수 있는 이 문제로 인해 한편으로는 숙련인력난이,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사회안전망 적용 대상자 수백만 명이 양산되었다. 경제성장은 고숙련 인력의 공급과 적절한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적 보호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의회의 결정이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면 앞으로 경기부양책이 점차 만료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근간을 보다 튼튼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KLI**